

취업·정착 지원...외국인 인재 유치 나선다

전남도, 법무부 이민정책 미래전략 대응 농어업 숙련비자·지역특화형 비자 활용

전남도가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맞춰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취업·정착 연계 이민외국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전략은 우수인재 유치 확대,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신설,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 도입,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사회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은 전남도가 광역형 비자 설계 과정에서 지속 건의한 계절근로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와 정착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광역형 비자 본사업에 대비해 농어업 숙련인력 중심의 이민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으로 유입된 계절근로자를 숙련인력으로 육성하고 장기 체류 전환과 연계한 정착 모델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에 대비해 광역형 비자 설계 안에 농어촌 기능인력, 유학생, 글로벌 벤처·마케팅 인재 등을 포함한 정주형 비자 체계를 담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사회통합교육 강화와 외국인 권익 보호 기조에 맞춰 한국어 교육과 생활 적응 지원을 확대한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통·번역, 노무·법률 상담, 고충 처리 등 현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또 법무부의 지역 활력 소상공인 특례 도입에 맞춰 인구 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지역 취



전남 수산물 활용 외식상품 개발 협약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17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 수산물 활용 로코노미 외식상품 개발·홍보를 위한 전남도-풀무원푸드앤컬처-완도군 간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활용도 확대한다.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자 설명회를 열고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지역 유학생 간 취업 매칭 사업도 추진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7-M 비자와 연계한 에너지·전기 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도 본격화한다. 목포과학대학교가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에 선정돼 전남·광주권 유일의 E-7-M 연계 기반을 확보했으며,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연간 50명 수준의 기술 인력을 양성해 취업과 장기체류

로 이어지는 정착 경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농어업 숙련인력 확보, 유학생 취업·정착, 소상공인 인력 지원

등 상생형 정주 기반을 마련해 지역 소멸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市-하나은행-신보-기보-광주상의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협약

광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하나은행, 광주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 용자 지원을 내용으로 한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민·관·공이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 유통성을 공급하고 거점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전업률 30%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 업체에 3억~5억원 한도의 용자와 2~4%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 지원 400억원 등 총 1천9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400억원을 출연하고 양 보증기관은 보증료를 감면해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광주상의는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함평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남 4번째 확진...방역 초비상

영광·나주·무안에 이어 함평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전남 축산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함평군 신광면 소재 양돈농장에 대한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정밀 검사 결과, ASF 양성인 최종 확인됐다. 전남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 농장은 돼지 2천64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 검사 결과, 폐사체 처리기 주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특별 관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축 처분을 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양돈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해 이동제한 및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전남도는 현장지원관을 파견, 발생원인 등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방역지역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자원을 총동원,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농장 내부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들어 ASF는 지난 16일 기준 전국에서 총 24건 발생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즉각 실천하라"

"李대통령 개헌 검토 지시 환영"

국회 로드맵 마련·신속 추진 촉구

광주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성명서를 내 "대통령이 5·18정신과 부마항쟁의 가치를 함께 언급하며 공식 검토를 지시한 것은 매우 뜻 깊다"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적 가치로 확립하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5·18정신의 헌법적 가치는 이미 오랜 시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정치권 역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정부

와 국회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확정하고 즉각 실천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광주시는 "국회는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6·3 지방선거 동시 투표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4월 내 발의라는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즉시 나서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여야 정치권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정치권이 매년 오월마다 광주에서 다짐했던 약속들이 실질적인 헌법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이번 개헌 과정에서 조당적인 협력과 지혜를 모아 개헌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5·18정신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법적 근간이 되는 그날까지 140만 시민의 의지를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이번 개헌이 광주의 눈물을 닦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2026 WORLD WATER DAY

세계 물의 날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

기념식 | 3. 20.(금) 영산강유역환경청
부대행사 | 3. 27.(금) 나무심기 행사(화순)